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제7공화국 진입 위한 개헌” 주장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수도 이전 위한 헌법 개정 등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두 번째로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밝혔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세 번째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네 번째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현행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 조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린다”면서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이처럼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다”고 말했다.다섯 번째로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여섯 번째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곱 번째로는 ‘토지공개념’ 강화를 주장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